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226053 배당이의
2025가단5512(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배당이의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 고 1.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 론 종 결 2025. 4. 16.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4. 11. 27. 소취하간주로 종료



되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소송종료 이후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2.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금 19,606,740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금 47,882,094원,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 32,780,052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100,268,88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가.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원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배당절차에서 83,279,836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금 2873호로 공탁된 100,268,886원 중 83,279,836원의 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9,606,74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배당액 47,882,094원을 0원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83,279,83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시는 19,606,740원을, 피고 주식회사 C은 47,882,094원을, 피고 D 주식회사는 15,791,002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취하간주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24. 9. 10.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원고들 및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모두 2024. 11. 27. 14:20 이 법원 제7호 법정(제4별관)에서 열린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024. 11. 27.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비록 이 법원이 소취하간주 사실을 간파하고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79조가 규정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를 구하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한 2025. 1. 9. 이전인 2024. 11. 27. 이미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8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사건 경위 및 배당절차 진행내용-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합니다)의 소외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차전2393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지급명령(원금 1,4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9. 30.까지 연5%의,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각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소외 G은 피고 D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카정 제1134호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위 결정에 따라 2021. 12. 8. 금일역원(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담보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같은 법원에 공탁(2021년금2873호)하였습니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24. 2. 27.자 공탁사유신고서(2024.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에 의하면,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행이라고 합니다)은 2021. 12. 23. 채권자 피고 C은행, 채무자 G,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21. 12. 28. 송달되었습니다.

(2) 피고 D은 2022. 2. 16. 채권자 피고 D, 채무자 G,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22. 2. 21. 송달되었습니다.



(3) 피고 ○○시는 2022. 4. 21. 채무자를 G []으로 하여 압류금액 10,726,450 원으로 한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22. 4. 28. 송달되었으며, 다시 2023. 4. 25. 채무자를 G []으로 하여 압류금액 19,606,740원으로 한 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는 2023. 5. 18. 송달되었습니다.

(4) 원고들은 2024. 2. 14. 채권자 A [], B [], 채무자 피고 D [], 제3 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24. 2. 16. 송달되었습니다(대상 채권은 피고 D []이 위 담보공탁금 1억원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입니다).

라. 배당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 6. 12. 실제 배당할 금액 100,268,886원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피고 ○○시에게 19,606,740원, 피고 C []은행에게 47,882,094원, 피고 D []에게 32,780,05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시, C []은행, D [] 전원에 대해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2. 배당 이의 원인

가. 이 사건 담보공탁금은 소외 G []이 피고 D []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함에 있어서 피고 D []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담보공탁금에 대해서 피고 D []은 그 피담보채권(강제집행정지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 채권자들(이 사건 피고 ○○시, C 은행)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한편, 피고 D 은 소외 G 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확정받았는바, 그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이후의 경우는 그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D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강제집행정지에 따라 그 강제집행정지 이후 원금 14억원에 대한 연15%의 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D 은 위 강제집행정지에 따라 그 강제집행정지일로부터 연5%의 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피고 D 이 위 강제집행정지에 따라 입은 손해 원금 14억원에 대한 연15% 또는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비록, 피고 D 이 위 G 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 D 이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이후 원금 14억원에 대한 연15% 또는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고, 위 지연손해금은 위 담보공탁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G 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 ○○시, C 은행에게 배당될 금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원인

1. 원고들의 배당요구권 부존재

원고들은 2024. 2. 14. 채무자를 피고 D,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D의 담보권실행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타채325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게 2024. 2. 21. 송달되었습니다(을 제4호증, 2024타채325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	
--------	------	--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청구채권 중 2,719,042,19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24. 1. 12. 이를 소의 H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24. 1. 31.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습니다(을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을 제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중 일부 참조>

	2024년 1월 12일	
발신인(채권양도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렇다면,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4호증)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24. 2. 21. 이전인 2024. 1. 31. 피고 D의 배당금채권은 소외 H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2. 피고 ○○시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권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된 공탁금은 원고들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 D가 우선하며 피고 ○○시 및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D의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 ○○시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에서의 주장을 참가인의 이익으로 원용하여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금은 모두 일용 피고 D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참가인의 권리

한편 참가인은, 피고 D에 의한 배당금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된 2024.



1. 31. 이전인 2022. 9. 6. 피고 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83,279,836원에 관하여 2022타채453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6호중)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2. 9. 16.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권리는 피고 의 채권양도에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금 중 피고 이 배당받아야 하는 금액 중 83,279,836원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들 및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고 만이 배당금 100,268,886원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중 83,279,836원에 관하여 참가인은 추심할 권한이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의 대상이 되는 공탁금에 관하여 그 중 83,279,836원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자신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배당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배당 절차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배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추심권이 인정되는 83,279,836원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금2873호 공탁금 중 83,279,836원의 출급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5.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한편,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배당이의소송의 절차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피고들이 갑 제1호증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참가인에게, 피고 ○○시는 19,606,740원을, 피고 주식회사 C 은 47,882,094원을, 피고 D 주식회사 15,791,002원을 각 지급하라는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들에 대한 청구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참가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의 배당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원고들을 상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83,279,836원의 배당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

참가인은 배당권자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 D 주식회사의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참가인은 피고들의 배당액을 0원으로 정정하고 참가인의 배당액을 83,279,836원으로 하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배당이의와 관련하여

피고 ○○시는 참가인의 경우 [D]에게 배당된 32,780,052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은 주식회사 [D]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배당표의 기재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D]은 이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D]의 추심권자인 참가인은 [D]이 배당받을 권리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인은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참가인이 나머지 금액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